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정신대 · 고용 · 인권 등 9개조항 결의문 채택

회의 정례화 큰 성과, 3차 98년 몽고 울란바토르 확정

8월 22일부터 타워호텔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고, 타이완 등 7개 지역 4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여성 NGO위원회(공동대표 손봉숙)의 주최로 열린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24일 막을 내렸다.

정신대 문제 · 고용안정 · 인권 세 부문의 핫 이슈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종교와 문화 · 환경과 개발 · 경제 및 개발 · 여성에 대한 폭력 · 평화운동 등 6개의 워크숍을 벌인 이들은 행사 마지막날 각 워크숍별로 9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했다.

한국 NGO는 지난 94년 북경대회를 위한 준비회의로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데 이어 두번째 회의로 열린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여성들간의 공동결의문이 채택된 점'과 '3차 대회를 몽고에서 개최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대회가 정례화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24일 참가자 만장 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아시아평화기금을 철회하고 법적 책임과 국가배상을 할 것,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해 여

성의 평등한 취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직장에서의 성차별 제거 및 기혼 여성의 취업안정 등이 포함되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사회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채택됐다.

이밖에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 30% 할당 제를 실시할 것, 여성을 차별해 온 교역과 관습들로부터 해방,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어린이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부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또 참석자들은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각국 정부가 핵발전소와 핵무기개발 중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에 유해산업폐기물과 핵폐기물을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이슈로



22일부터 24일까지 타워호텔에서 열린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 정신대 · 고용 · 인권 등 9개 조항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부각된 정신대문제 워크숍은 23일 오전 11시 타워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여기서 필리핀 대표는 최근 신문에 보도된 필리핀 정신대 피해자들의 아시아여성기금 수령

금의 성격도 모른 채 기금을 받은 것으로 사실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사과 없이 국민기금으로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는 데

우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해 여성장애인 1백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이상이 초 · 중등의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

했으며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이라는 답변이 50%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정부의 한국 여성 장애인 문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장애인복

지법의 제정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련해 유해우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사무국장은 "올해 7월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7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11만 명이 불법체류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외국인 노동력을 쓰기 위해 무분별하게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을 하도록 체류연장을 해주는 모순된 정책을 밟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법조치와 산업기술연수제도 철폐 및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타워호텔 본관 1층 텍스 룸에서 열린 고용문제 워크숍에서는 한 대표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로를 세웠던 한국여성들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여성들은 육아·의료서비스를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숙 기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 · 국가배상요구 한국 여성장애인 인권문제 부각

이 사실이라고 시인했으나 일본의 회유를 이기지 못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대만 대표는 대만의 소수원주민 피해여성의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시아여성기

의견을 같이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순덕의 한국 정신대 할머니 4명은 "국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저자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

았으며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이라는 답변이 50%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정부의 한국 여성 장애인 문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장애인복